

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(서삼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018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1. 5. 18.

발 의 자 : 서삼석 · 이상현 · 김민철
서영교 · 홍정민 · 윤재갑
김종민 · 강선우 · 김영배
김영진 · 서동용 · 김영주
김원이 · 임호선 · 이수진
최종윤 · 이용선 · 김철민
신동근 · 강병원 · 이개호
도종환 · 김승원 · 김정호
의원(2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라 행정관청은 일정한 수역에 수산자원의 보호·회복의 목적으로 바다숲, 바다목장, 산란·서식장 등을 조성하기 위해 인공어초 등의 구조물을 시설하고 있음.

수산자원조성사업이 해역에 연안생태계 복원 및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익목적으로 시행됨에도 불구하고, 구조물(인공어초, 자연석 등)을 시설하는 경우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, 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하며, 「해양환경관리법」에 따라 해역이용협의를 거쳐야 함.

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를 얻기 위해 사전적으로 받아야 하는 해

역이용협의 절차에 시간과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·사용 허가 및 협의·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, 수산자원조성사업 시행 전·후에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수산자원조성의 효과 등을 조사·평가하도록 하는 사전·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하며, 사전·사후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「해양환경관리법」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및 해양환경영향조사를 거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41조).

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“시행한 수면에 대하여 수산자원조성 효과를 조사·평가하여야 하며,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추진 방안,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”를 “시행하기 전·후에 해당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수산자원조성의 효과 등을 조사·평가(이하 “사전·사후영향조사”라 한다)하여야 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제2항”을 “제3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행정관청(제61조에 따라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·단체·협회 등도 포함한다)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할 경우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·사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·승인을 거친 것으로 본다.

④ 행정관청이 제3항에 따른 사전·사후영향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「해양환경관리법」 제8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해

역이용협의 및 같은 법 제95조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.

⑦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추진방안, 사전·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1조(수산자원조성사업) ①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41조(수산자원조성사업) ① (현행과 같음) <u>② 행정관청(제61조에 따라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·단체·협회 등도 포함한다)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할 경우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·사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·승인을 거친 것으로 본다.</u>
<u>②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한 수면에 대하여 수산자원조성 효과를 조사·평가하여야 하며,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추진방안,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.</u> <u><신 설></u>	<u>③ ----- -----시행하기 전·후에 해당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수산자원조성의 효과 등을 조사·평가(이하 “사전·사후영향조사”라 한다)하여야 한다.</u> <u>④ 행정관청이 제3항에 따른 사전·사후영향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「해양환경관리법」 제</u>

<p>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시·도지사 와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<u>제2항</u>에 따라 시행한 수산자원 조성 효과를 조사·평가한 결 과와 제49조제4항에 따른 수산 자원관리수면 관리·이용 현황 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.</p> <p>④ (생략) <u><신설></u></p>	<p><u>8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및 같 은 법 제95조에 따른 해양환경 영향조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.</u></p> <p>⑤ ----- -----<u>제3</u> <u>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⑥ (현행 제4항과 같음)</p> <p>⑦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추진방 안, 사전·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<u>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</u></p>
---	--